

光州日那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55호 1판 (음력 4월 8일)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광주시장·전남지사 '5파전'

한국당, 20년만에 호남 광역단체장 무공천 예고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D-2

6·1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24~ 25일)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 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짜여 지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뒤늦게 확정했고, 정의당과 민중 당도 광주와 전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놓으면서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는 5 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주·전 남·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를 아직까지 내 지 못하면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 이후 20년 만에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무공천이 예고됐다.

21일 주요 정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바른 미래당 전덕영 후보, 민주평화당 김종배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주당 윤민호 후보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후보,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 민주평화당 민 영삼 후보, 정의당 노형태 후보, 민주당 이 성수 후보 등으로 대진표가 짜였다.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호 남에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독주 속에 후보를 찾지 못해 애 를 먹었지만, 뒤늦게 후보들을 모두 확정

하고 민주당과 일전을 준비중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우세' 상 황 굳히기에 나섰고, 평화당과 미래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일당 독점 견제를 내세우 면서 새로운 인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 는 필승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4곳의 후보를 냈지 만, 광주와 전남, 전북에선 광역단체장 후 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25일까지인 만큼 4일 내 에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된다.

자유한국당은 전신인 민주자유당과 한 나라당, 새누리당을 포함해 1998년 6월4일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했다. 20년 만에 또 다시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단 1명도 없는 상황이고, 광역의원 예비후 보는 전북에서 1명,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광주에서 단 1명이 등록했을 뿐이다.

이처럼 호남에서 좀처럼 자유한국당 후 보를 찾아볼 수 없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 부 출범 후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 들고 있고, 호남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정도로 여권 우위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15% 이상의 득표가 어렵다 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출마를 기피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에 출마해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그 비용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을 전액을, 10%이상 득표시 절반을 각각 보전받을 수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한 그동안의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제1 회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전남지사 후 보였던 전석홍 전 장관(26.49%) 한 명 뿐 이었다. 15% 이상은 득표 못했지만, 10% 대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4명 뿐이었다.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 당에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해 영입하려했 지만, 호남지역에서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 람을 찾기 어렵다"면서 "특히 중앙당도 홍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광역단체 장 후보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아 후보 등록일까지 후보를 구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6회 성년의 날인 21일, 광주시 남구 향교에서 열린 성년례에서 1999년생으로 성인이 된 한국 여성과 베트남 여성들이 머 리에 쪽을 올리고 비녀를 끼우는 '계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감 후보, 시교육청·私學 관계 설정

"자유책임" 장 "신상필벌"

대입제도·교권 학생인권

"개선 필요하다" 한목소리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장 휘국·최영태 후보는 21일 "대입제도, 교 권·학생인권 보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터뷰 5면〉 이들은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광주일 보와 서면인터뷰에서 현행 대입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거나 교육의 본 질에서 벗어나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 다.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지역 교육 계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 라고 입을 모았다.

후보들은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을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보다 더 중요한 전형으로 삼아야한다는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그 선결과제로는 기록(학교) 과 평가(대학)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세 후보는 그러나 사학과의 관계설정,

광주학생들의 학업성취도(실력), 중·고 교 학생 교육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뚜렷했다. 이정선·최영태 후보는 "현 장휘국 교육감 체제의 8년간 광주 학 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학부 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장 후보와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 역량강화도 중요하다. 하지 만 대입은 현실인 만큼 학생실력 향상을

반면 장 후보는 "광주학생 실력이 떨 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지표를 보고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졌다고 비판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해서는 안 된다. 실력이 과거만 못하다고

떨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과 사립학교 간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 후보는

자꾸 지적하면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만

'자유와 책임', 장 후보는 '신상필벌', 최 후보는 '소통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교단의 고질적 문제인 '교권침해'에 대 해서는 세 후보자 모두 적극적인 대책마

련 의지는 드러냈으나 구체적인 방안 제 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 후보는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 원 평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일보

5·18계엄군 고백-보안대 허장환 ▶6면

러시아월드컵 태극전사 출사표 ▶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 광 신 대 학 교 www.kwangshin.ac.kr

'드루킹 특검' 최장 90일 활동 추경 3조8000억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4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 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의 수 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 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 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 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 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 명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 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일 20 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 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3조8000억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3조8535억 원이 었던 정부안 대비 3985억 원 감액하는 대 신, 3766억 원을 증액해 전체 순감 규모는 약 219억원이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

예비비 25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은 개 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는 목포・ 영암, 군산,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 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 화를 위해 지원된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서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논란이 확산되 고 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문 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 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 효 3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 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 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 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 로 분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